

사법시험 존치로 학벌주의 완화하자



김 동 훈

•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근래들어 법조계 및 법학계와 관련하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는 사법시험의 존치여부에 관한 논란이다. 현재 시간표대로라면 사법시험은 내년에 마지막 1차시험을 치르게 된다.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결정적인 계기로서 변호사의 독점적 공급을 보장하게 될 사법시험의 폐지를 학수고대해온 로스쿨 측의 기대는 자못 크다. 그러나 사법시험 폐지의 시기가 가까이 오면서 많은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사법시험의 폐지는 법과대학만을 졸업하여서 법조인인 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고 이는 법과대학의 입장에서 준사망선고와 같은 것이어서 당연히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서게 되었다. 최근에 한국법학교수회가 로스쿨과 법과대학의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지만 주로 로스쿨 교수들이 나와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하고, 로스쿨은 법조인을, 법과대학은 유사법조인을 양성을 하는 것을 상생방안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법과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법학교수회는 같은 시간에 별도의 토론회를 열어,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 로스쿨은 비법학전공자만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변호사시험을 거친 변호사를, 법과대학은 사법시험을 통하여 전통적인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상생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과연 양자가 합의할 수 있는 상생방안이 있기는 한 것일까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사법시험의 존치를 부르짖는 목소리는 물론 법과대학 교수들의 것만이 아니다.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들, 법과대학의 재학생들과 그들을 대표하는 학생회, 또 고시촌이 세계의 터전이었던 신림동 주민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하게 되었다. 결정적인 것은 법조인들의 대표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 또 서울변호사협회가 이러한 사법시험 존치 운동의 선봉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개별지역의 많은 목소리보다 더 의미있고 중요한 것은 국민들 다수의 여론이 법조인 양성을 로스쿨로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 9월 24일 입법정책전문연구기관인 (주)한국입법정책연구원과 리서치미디어스, 입법정책신문이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합리적인 변호사 양성 제도로서 '로스쿨제도 없애고 사법시험 제도로 단일화해야' 응답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 병행 운영해야' 응답도 33.9%에 달했다. 반면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단일화' 응답은 11.2%에 불과했다.

필자는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많은 쟁점들 중에 그 간 그다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이른바 '학벌주의'의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의견을 개진해보고자 한다. 최근 로스쿨협회의 오수근 이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특이한 논점을 제시해 필자의 주목을 끌었다. 오교수는 사법시험체제에서 소수 특정학교에 집중돼 있던 '사법권력'의 '분산'을 로스쿨 도입의 장점으로 꼽았다. 즉, 사법시험 합격자의 출신 대학은 40개에 불과했는데 로스쿨로 바뀌면서 입학생의 출신대학이 102개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가가 입법을 통해 기존의 권력을 분산한 것은 해방 직후 토지개혁 이후 로스쿨이 처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다.

과연 이것이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로스쿨 제도의 성취인가?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25개의 로스쿨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지만 이들 로스쿨에 엄연한 서열이 매우 확고하게 존재한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기존의 대학서열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 로스쿨제도 출발 시 학교선정과 인원 할당이라는 것도 공정한 심사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법과대학 서열에 따라 정해진 인원 2000명을 적당히 배분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확고한 로스쿨 서열로 인해 지원자들이 더 높은 서열의 로스쿨 입학에 대해 재수나 삼수를 하는 것도 흔한 일이며 서열이 낮은, 특히 지방 소재의 로스쿨들은 장래마저 매우 불안정하다.

서열이 높은 로스쿨일수록 그 위세는 대단하다. 자타공인 서열 1위인 서울대 로스쿨은 2014년 기준 153명 신입생 중 100명(65.4%)을 자교생 출신으로 선발했다. 현행법상 타교 학부 출신을 3분의 1 이상 의무적으로 뽑도록 되어있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대는 이 법령에 저촉하지 않는 최대한의 자교 출신으로 충원한 셈이고, 이 제한 규정마저 없었다면 전원을 자교 출신으로 채웠을 법하다. 이외에 주요 로스쿨들의 자교 출신 비율도 50%를 넘는다. 예컨대 연세대는 125명 중 71명(57%), 성균관대는 125명 중 64명(51%)을 자교 출신으로 뽑았다.

즉, 주요 로스쿨들은 로스쿨을 자기 학교의 사유기관으로 전락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율의 타고 출신 선발도 대체로 기존의 대학서열에 따라 총원했다. 법학적성시험이니, 면접이니 하며 공정한 선발을 내세우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선발과정에 대해 상식적으로 누구도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그 밖의 로스쿨들도 주로 출신학부의 서열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어 무리를 무릅쓰고 지방로스쿨에 인원을 배정해준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있다.

로스쿨은 입구의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출구의 불공정성도 이에 못지않다. 이른바 10대 로펌 입사자의 출신 로스쿨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서울 소재의 몇몇 로스쿨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외의 로스쿨들은 생색내기 정도에 불과하다. 더욱이 최근의 여러 잡음이 말하듯이 여러 인맥이나 집안배경 또는 청탁 등이 작용하기도 한다.

사법시험 체제하에서는 어떠한가. 예컨대 올해 입소한 46기 사법연수생 221명 중 이른바 'SKY'대 출신비율은 44% 정도라고 한다. 필자가 재직하는 대학에서도 올해 152명의 2차 합격자 중 재학 또는 졸업생 3명이 포함되었다. 즉 사법시험 체제하에서는 대학입시라는 첫 경쟁의 관문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이른바 '패자부활전'으로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의미가 컸다. 사교육이나 환경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대학입시보다도 사법시험은 본인의 성실성과 노력이 더 빛을 발하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그리하여 사법시험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의 최후의 보루로서 인식되어왔던 것이며 지난 60여년 가까이 단 한 번도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린 적이 없었다. 이처럼 사법시험은 학력이나 출신학교가 개인의 '본질적 구성부분'(wesentlicher Bestandteil)이 되는 학벌사회에서 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여왔다. 즉 출신학부가 서열이 조금 낮더라도 사법시험 합격과 그 성적을 통하여 새로운 성취의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였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도 고위직이나 대형 로펌 등에서 출신학부를 많이 고려하는 학벌주의가 상당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를 만회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로스쿨에서는 이러한 길이 거의 막히게 됐고 원색적인 학벌주의만이 횡행하는 고약한 상황이 초래됐다. 학부중심의 학벌주의에 다시 로스쿨의 서열화까지 겹쳐서 이중의 굴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로스쿨 측은 전국 로스쿨에 1명이라도 입학한 학생들의 출신교 수가 사법시험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는 숫자놀음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맹목의 학벌주의를 완화하는 측면에서라도 시험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사법시험이 '희망의 사다리'로서 존속해야 할 것이다.